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117 (2023. 6. 5. ~ 6. 9.)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인프라테크, 조세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배터리·백신·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인프라, 인사/노무	②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사내 대학, 기업인재개발기관을 지정해 기업 내에서 필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특화 교육, 수요 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체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행정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도록 함.
공포 법령	공정거래	④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며 대리점주 피해를 구제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범위가 최대 70%까지 확대하도록 함.
입법/ 행정예고	기업금융	⑤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율성 강화 및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 범위가 확대되며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투자 가능 비중도 상향하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김상훈 (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 · 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함.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존재하고 있어, 투자는 많이 했으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법인세는 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정부는 '이년(移年)'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향후 폐업 또는 업종변경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초기 투자가 절실한 첨단산업의 경우 미래보다는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대기업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더 절실한 실정임. 이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Q3O0N4M2U7V1U1B3A1B5Z5Y6G9E2	매일경제 23.05.30. [단독] 與 '한국판 IRA법' 발의…이익 못내도 투자금 환급해준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48290	23.05.31.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양금희 (국민의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고도화됨에 따라 숙련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을 제정하고 첨단산업 관련 인재육성을 위하여 13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고, EU는 올해 내에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2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임. 한편, 우리나라도 급성장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매우 곤란한 인력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재는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우수 해외인재의 유입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실정임. 그런데 첨단산업 기술의 특성상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산업계는 국내 투자의 79%, 기술개발 인력의 73%를 점유하는 등 첨단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적 · 물적 자원,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 및 기술역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인재육성의 핵심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중 ·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병행하되 시급성이 높은 첨단분야는 산업계가 직접 인재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인재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요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산업의 인재육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첨단산업, 첨단산업 인재혁신, 첨단산업 인재육성, 교육기관등, 해외인재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서울경제 23.05.31. [단독] 첨단산업 인력 32만명 부족… 기업이 '실무형 인재' 직접 키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SKE1R3W	23.05.31.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마. 인재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첨단산업인력 위기업종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사내대학원 · 계약학과등의 설치 · 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특성화대학등 ·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 · 전문양성인의 등록,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 · 공유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설립,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지역인재 확보, 청년 · 여성인재의 육성 · 활용, 중소 · 중견기업 및 해외인재 유치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도록 하며, 규제 개선의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그 밖에 자료제출, 청문, 권한과 업무의 위임 · 위탁,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P3N0N5M2I4I1G4H2G6G3F9M2N5L1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송언석 (국민의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D0L0S6K1V8D0O9Q4T5C5T1P9K2J7	헤럴드경제 23.06.05. 與 '시민단체 감사의무 확대' 보조금법 개정 추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0500035 1	20.06.18. 제안 20.09.21.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0.09.22. 소위 상정 20.11.11. 소위 상정 21.11.18. 소위 상정/ 축조심사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1차 조정과 위반행위의 성격이나 자진 시정 · 조사 협력 등의 사유에 따른 2차 조정을 거쳐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2차 조정 상한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법 상태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과징금 산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https://www.law.go.kr/법령/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뉴시스 23.05.30. 사업주, 대리점주 피해 구제하면 과징금 최대 70%까지 감면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30_0002320231&cID=10401&pID=10400	**23.06.07. 일부개정** **23.06.07.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안 제10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열회사 증권 편입한도 상향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편입 가능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 한도 상향(안 제13조) 우량한 장기 자산의 편입 한도를 상향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적립금 간 현금흐름 일치 전략 지원 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11조)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분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 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을 추가 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안 제8조의3) 근로자가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 마련 출처: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3890&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매일경제 23.06.01. 퇴직연금 운용 유연해진다 RP·MMF 100% 투자 가능 https://www.mk.co.kr/news/stock/10750756	23.06.02. ~ 23.07.02.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조선일보][기사] '근로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023.06.0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6/02/AHZY27VDUFGHTEYYWSWTONPS6Q/

주요내용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 A사 소속 직원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3층 환기구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음. 조사 결과 A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나 추락 방호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이후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짐. 검찰은 이 같은 안이한 대응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함. 다만 이씨가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김.

[한겨레][기사] 충북 보은 노동자 끼임 사고 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 (2023.06.05.)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94669.html

주요내용 하청 업체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 청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충북 보은 성형 사출기 주조 공장 노동자 ㄴ(70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음. 지난해 2월24일 원청에서 주물 표면의 모래 제거 공정을 하도급받은 하청 소속 노동자 ㄴ씨는 기계 정비 작업하다가 하청 업체 대표 ㄷ씨의 조작 실수로 기계에 끼여 숨졌음. 이와 관련해 검찰은 “원청 대표 ㄱ씨가 안전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원청에서 설치한 중대재해예방팀 구성원 6명 모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고, 이 가운데 5명은 주로 생산업무를 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함.

[연합뉴스][기사] 경찰 "정자교, 적절한 유지보수 이뤄지지 않아 붕괴" (2023.06.05.)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5082500061?input=1195m

주요내용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됨. 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국과수는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함. 경찰은 이번에 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 및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교량 붕괴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힘쓸 계획. 지금까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각각 입건하는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함.

[조선일보][기사] 중대재해처벌 '위험성 평가'가 핵심... 주 처벌 대상은 대표이사 (2023.06.07.)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6/07/JFJ6JLVDEFACND6SG3RZPUTEA4/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기준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 처벌대상은 대표이사가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어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CSO)'를 두고 있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7일 대한상의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4조 제3호는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내용임. 한편, 법 위반시 '대표이사'가 주로 처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 그룹오너(회장)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인프라테크팀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조세그룹

이규철
대표변호사

T : 02-3016-5335
E : kclee@draju.com

에너지/인프라팀

박미현
외국변호사

T : 02-3016-8731
E : mmpark@draju.com

인사/노무팀

김보훈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06
E : bhkim@draju.com

행정팀

송창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66
E : chsong@draju.com

공정거래그룹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기업금융그룹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